

“행정통합 특별법 16일 발의…2월 국회 통과 목표”

김영록 전남지사, 도의회서 통합 로드맵 공유

통합필요성·추진기구 발족·특례조항 등 설명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로드맵이 8일 첫 공개됐다. 특별도보다는 ‘특별시’로 하고, 청사는 현재의 전남도청과 동부청사. 광주시청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지역 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해 27개 시·군·구 모두가 손해 보지 않는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전남도는 8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설명회’를 열어 행정통합 필요성, 추진기구 발

족, 특별법안 발의 등 로드맵을 공유했다. 설명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장인 강위원 경제부지사와 실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선 김영록 지사가 직접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필요성과 추진계획, 통합에 대한 주요 관심사항 등을 설명했다. 김영록 지사는 “무안국제공항에 광주 민간공항 공공화 통합 이전의 문제가 해결

되면서 광주·전남 상생의 물꼬가 트였고, 정부가 부여하겠다는 여러 가지 과감한 재정 행정 권한 인센티브를 받아 AI 에너지 수도 광주·전남 대통합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다”고 고심 끝에 결정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통합시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한 만큼, 미래 첨단 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통합 기본 골격을 빨리 실무적으로 만들기 위해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설치했고, 앞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 협의회를 민관 합동 실무 기구로 두고, 자문기구로 많게는 500명 규모의 광주·전남

범시도민 행정통합추진협의회도 구성해 기본안을 빨리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도의회에 추가로 보고하고 그 안으로 성립이 되면 시도민께 설명회를 하겠다는 절차도 소개했다. 김영록 지사는 “관건은 얼마나 빨리 특별법을 만드느냐”라며 “발의 목표는 1월 16일쯤이고, 민주당에서 2월 말까지는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빠르게 만들수록 좋겠다는 임정”이라고 피력했다. 특별법에 포함될 주요 특례로는 재정 권한과 행정 권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에너지 분야 허가권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투자심사 당당성 조사 면제, 예비타당

성조사 면제를 비롯해 전남도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특례로 인정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서울특별시와 같은 지위를 얻고, 중앙부처와 동등한 주체로 격상되는 의미를 담아 특별도보다는 특별시로 하고, 청사는 현재의 전남도청과 동부청사, 광주시청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역 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해 27개 시·군·구 모두가 손해 보지 않는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전남도는 도의회 의견을 지속해서 들은 뒤 특별법안을 마련해 2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광주시와 협력할 계획이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

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광주전남 통합 지방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행정통합은 지방소멸위기와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해 지역이 주도하는 미래 성장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5국 3특’ 전략으로 현 정부의 핵심 과제다. 김영록 지사는 “행정통합으로 남부권 반도체 벨트와 같은 첨단산업 육성, 공공기관 이전 우위, 행·재정적 권한 강화 등 지역 주도 성장의 길을 열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과 전남도와 광주시의 하나된 의지, 시민들의 열망이 어우러진 지금이 통합의 최적기다”고 밝혔다. 박정철 기자 holbul@gwangnam.co.kr

문인 북구청장 사임 철회…선거판 요동

문상필·정달성 등 출마예정자 비판 잇따라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사퇴를 철회하면서 북구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출마가 예상됐던 문 청장의 갑작스러운 행보에 북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이던 입지자들의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지역 정계에 따르면 문인 북구청장은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이날 사임할 예정이었으나, 전남 북구의회에 사임 철회 통지서를 제출하며 사임을 번복했다.

이후 문 청장은 사임 철회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북구민의 목소리를 통합 과정에 온전히 담아내야 할 중요할 시기라고 판단해 기존에 밝힌 사임 결정을 우선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문 구청장의 입장 변화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오랫동안 준비한 광주시장 선거에 배수진을 치고 나서기 위해 청장직을 조기 사퇴하려 했지만 시·도 통합 가능성에 따른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분석

이 가장 높다. 직을 유지하면서 북구청장 3선 도전 가능성도 열어둔 셈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북구청장 출마예정자들은 문 청장의 행보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상필 광주 북구청장 출마예정자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북구를 떠나려 했던 인물이 이제야 구민을 찾는 것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예의·염치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북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정달성 북구의원도 “이번 결정은 단순한 판단변경이 아니라 주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드러낸 것이다”며 “주민 혼란을 초래하고, 북구의 행정을 불확실성 속으로 밀어 넣은 선택에 대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출마예정자인 정다는 광주시의원도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글을 올려 “행정 최고 책임자의 말과 행동은 천금보다 무거워야 한다”며 “새털처럼 가벼워서는 안 된다”고 남겼다. 반면, 광주·전남 행정통합이란 중차대한 사안을 본인의 거취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송승중 북구청장 출마예정자는 “구청장 3선을 위해 사임을 철회했다면 모르지만, 행정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북구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현직을 유지하는 게 책임 있는 행장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오른쪽)와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이 8일 도청 접견실에서 ‘광주·전남 대통합 및 교육 대전환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도교육청, 행정통합·교육혁신 협력

김영록 지사·김대중 교육감, 대통합·교육 대전환 공동선언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교육 통합과 교육 혁신에 공식적으로 뜻을 모았다. 광주·전남 대통합 논의가 행정 영역을 넘어 교육 분야까지 확장되면서, 통합특별시 구상의 한 축인 교육 체계 개편 논의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8일 도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통합 필요성과 교육혁신 방안, 관련 특별법 제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어 ‘광주·전남 대통합 및 교육 대전환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양측은 선언문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의 주도권을 지역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주·전남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행정통합과 함께 교육 체계 역시 새로운 틀로 재편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미래 인재 양성과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전남도교육청이 광주·전남 대통합에 적극 찬성하고, 통합 특별시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도교육청이 행정통합의 핵심 주체로 참여해 교육 분야와 관련한 사항을 중심으로 통합특별시 특별법안 마련에 함께 나선다는 점도 명시됐다. 김영록 지사는 “교육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분야”라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시·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의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은 “광주·전남 대통합이라는 큰 흐름에 교육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은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영역인 만큼, 통합이 이뤄질 경우 오히려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박정철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주여성단체협의회 신년인사회 강기정 광주시장이 8일 오전 서구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광주여성단체협의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민주, 시도당위원장 지선 공천기구 참여 금지

“이해관계자 표결 배제 의무화…국회의원 보선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당 위원장의 공천 관련 기구 참여를 금지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지침’을 마련했다고 조승래 사무총장이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시스템 공천 투명성 강화, 공정 경선 제해를 없애기 위한 지침을 만드는 논의가 진행됐다”며 “시도당 위원장 참여는 금지하고, 지역위원장은 필수적 인원을 제외하고 공천관리 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당이) 이런 지침이 실제로 제대로 시행됐는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공천 현금 수수 의혹 등으로 어수선해진 당내 분위기를 수습하

고,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해관계자의 표결 배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조 사무총장은 “본인 지역과 관련된 사항,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돼 있을 경우 공천 심사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공천관리기구의 운용과 관련해서 회의가 진행되면 반드시 공개 브리핑을 통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며 “공천 관련 자료, 제보와 투서 등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 것인지 규정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전략 공천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김동찬 북구청장 출마예정자, 대통령 성과 환영

“한·중 관계 복원·경제협력 물꼬 튼 외교적 쾌거”

광주 북구청장 출마예정자인 김동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사진)는 8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성과에 대해 “한·중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실질적인 경제 협력의 물꼬를 튼 외교적 쾌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국빈 방문은 경제뿐만 아니라 관계를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경제·문화·인적 교류를 전면 확대하는 외교의 합의였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회담의 주요 성과 중 하나인 ‘광주 우치동물원 자이언트 판다 대여(임대) 합의’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특보는 “판다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외교의 상징이자 강력한 관광 콘텐츠”라며 “우치동물원이 위치한 광주 북구가 명실상부한 호남권 생태 관광의 중심



지로 도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우치공원과 동물원은 시설 노후화로 인해 시민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어 활성화 대책이 절실했던 상황”이라며 “이번 판다 유치 확정은 단순한 볼거리 추가를 넘어, 침체한 지역 상권을 살리고 ‘골목 도시 광주’를 완성하는 핵심 키(Key)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동찬 특보는 “풍부한 의정과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우치동물원이 ‘대한민국 제2의 판다 월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정책적 지원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

▶1면 ‘행정통합’서 계속

아울러,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조성,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반도체·AI 관련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인허가 권한이 통합 지자체에 대폭 이양될 것이지도 관심이다. 이는 통합 지자체가 기업 유치 과정에서 속도와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행정통합 관련 지원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조직 특례 부여, 지역 주력산업과 광역행정에 대한 대폭적인 권한 이양, 지방교부세와 소비세 배정 확대, 공공기관 우선 이전 검토, 초광역특별계정 설치와 지특회계 자율계정 단계적 확대, 권역별 성장엔진과 첨단 국가산단 조성, RE100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등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행정통합은 일정이 나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며 “시민

의견수렴과 함께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정치권과 민간단체의 지지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8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호남특위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지역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좌우하는 필수 과제”라며 “국가균형발전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계기”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와 시민 100여 명도 이날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특별자치추진위원회 출범을 선포했다. 추진위는 “청년 유출과 산업단지 경쟁력 약화 등 지역 위기 상황에서 행정 구역의 칸막이를 넘어 초광역 경제공동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